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교류증진 방안

Strategies to Promote Healthcare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李相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은 최근 수년간의 수해·가뭄 등 자연재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에서 표출되는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감안하여 그 동안 국내외 각종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북 지원활동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북한간 교류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언

북한은 최근 수년간의 수해·가뭄 등 자연재해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에서 표출되는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경제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제약공장, 의료기자재 공장들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해열진통제·설사치료제·항생제·마취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과 X-ray 필름, 외과 처치용 재료 등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체계'를 핵심으로 한 북한의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일 등(1999)²⁾에 의하면, 중국 내 탈북자 중 지난 1년간 북한에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탈북자가 조사대상자의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가장 많은 질병은 위장병(45%), 심장병(25%),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24%), 간염(21%), 결핵(9%), 콜레

1) 북한의 보건의료실태 및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간 교류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백화중, 『보건의료산업의 남북협력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발표자료, 2000. 참조

2) 서일·이윤환·이명근·최귀숙, 「중국내 난민건강실태」, 『통일연구』, 3(1), 1999, pp.307~328.

라(8%), 피부병(5%) 등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주민의 주요 사망원인도 영양실조, 설사, 탈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결핵 등으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망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감안하여 그동안 국내의 각종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북 지원활동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남한의 복지관련 단체, 종교단체, 의·약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학술회의 개최, 병원 건립 및 시설 현대화, 제약회사 및 한약재 제조공장 설립, 의료봉사단 파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간 교류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 상호신뢰 구축과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추진되는 교류형태를 현재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 등 각종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구급차, X-Ray 검진차, 의료장비, 의료용 소모품, 영양제·항생제·구충제·BCG 백신 등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보건산업부문에서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형태는 현재 '협력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협력사업은 대체로 지원사업의 성격을 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개성공단 건립 등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건의료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통일 전 단계에서의 남북한간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북한간 교류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간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의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국가적 목표 설정이 어렵다. 현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대북 지원이 일관성 있는 목표나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협력 분야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의약품·시설·장비 등의 소요량 등을 추정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별 지원·협력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실태 조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은 남한측과 국제기구 등이 담당하고 조사 자체는 북한측이 수행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측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 수집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자료의 선정 등을 북한측에 일임하는 등의 방안 등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단계별 지원·협력 목표와 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민간의 참여 유도, 민간의 대북 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협력이 정부, 국제기구, 각종 민간단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협력 주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협력·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단체 등의 경우 대북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측의 책임성 있는 접촉 창구를 찾는 데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 등에서 추진했던 대북 지원·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의 정보를 관련 민간단체 등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관련단체 등이 추진했던 지원·협력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거나 타 관련단체 등이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반복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관련 정부부처 등으로 가칭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협력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내 관련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부당국자간 남북 회담 등에 보건의료분야의 Agenda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타분야에서와 같이 당국자간 보건의료협정 체결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별도의 보건의료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타 부문의 협정·합의 등에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남북간 협력사업 활성화

일반 경제협력 분야와 연계하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민간 보건산업 부문의 대북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임금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노동집약적 보건산업부문 즉, 중저가 전자의료기기 제조, 카피 의약품 제조, 식품 가공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료기기·가공식품 등 생산품의 일부는 현지 대북 지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남북한간 협력사업으로 북한의 특정지역에 가칭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하여 북한의료인과 공동으로 진료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기술 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병원은 평양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하되, 우선 1~2개의 병원을 먼저 설립·운영한 후 병원운영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거쳐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종교단체 등에서 북한에 병원을 설립·제공한 적이 있으나 의약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협력 병원에 의료장비·의약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북한 의료인과 남한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진료 및 병원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대신 북한의 한약재를 반입하고 특정 품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북한측과 계약재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가격경쟁 등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포기한 한약재에 대해 품종 보존, 안정적 물량 확보 등의 차원에서 계약 재배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한약재를 발굴하고 북한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민간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대단위 한약재 재배·가공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의·약 분야의 공동연구와 한약재 자원조사를 추진하는 등 남북간 학술교류와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에서 사용되던 전통비방의 발굴·확산 및 제제화, 북한 또는 남한에서의 한의·약 박람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DMZ의 말라리아, 광견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이를 위해 개성 등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보건당국의 협조 하에 관련학회, 민간법인 등의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북 지원사업의 강화

결핵 등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약 및 영양제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영양결핍으로 인한 빈혈 및 각종 전염병 감염 등으로 사산·유산·저체중아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전기부족 등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체 발전장비, 유류 등과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전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다.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에 의한 인적·물적 접촉 증가와 함께 남한지역에 대한 방역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북한의료 인력들의 낙후된 의료기술 수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북한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남한측의 faculty를 파견하여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의 내용으로는 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이 지원의 실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을 통해 확인·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제시된 교류증진 방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정치·외교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본고는 단지 이러한 정치·외교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남북간 교류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간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

었으나, 남북간 교역과 보건의료분야의 교류가 꾸준히 증진되어 왔으며 그 교류의 형태와 내용도 다양화되어 왔다. 최근의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간 교류의 커다란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남북간 교류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교류영역 및 과제를 개발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